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사례 22 2021서울조정316, 2021서울조정317(병합) 각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빙상 코치의 성추행 혐의 보도와 관련, 검찰이 혐의를 내사종결로 각하 처리한 것은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알리기로 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빙상계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면서, 전직 스케이팅 선수 A 씨가 고등학생 시절 B 코치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으며, B 코치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노골적인 성추행을 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2년간 A 씨를 괴롭혀 A 씨는 선수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은 일부 젊은 빙상인들이 C연대를 구성하여 빙상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D 씨와 그 주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무차별 투서를 하였고, 자신은 허위 민원에 휘말려 음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의 어머니가 A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날 후에도 계속 강습을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사실만 보더라도 자신이 제자를 상습 성추행하고 폭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A 씨는 피해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 각하 처분을 내렸으므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검찰이 신청인에 관한 진정내사 사건을 각하로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언론중재법상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재부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추후보도로 반영해 주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다음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체육 지도자 성폭력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한 스피드스케이팅 지도자가 선수를 성추행했었다는 의혹,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피해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직접 털어놨습니다. **[중략]**

[A 씨/前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 제가 이런 걸 말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운동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훈련하던 고등학생 시절 B 코치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A 씨/前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 뽀뽀하고 그런 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했었고, 껴안는 건 기본이었고, 카톡이나 실제로 만나서 사랑한다, 영화도 따로 보자고...]

노골적인 성추행과 함께 폭언도 비밀비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A 씨는 2년간 이어진 상습 성추행에 팀을 옮겼지만, 이후에도 빙상장에서 B 코치를 대회나 훈련 때마다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 결국 국가대표의 꿈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성추행 의혹 제기됐던 빙상 코치에 검찰 '각하' 처분 ...“충분한 근거 없어”

**본문내용:** 본 방송은 20XX년 △월 조정대상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20XX년 ▲월,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 가족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코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③, ④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3** 2021서울조정1172·1173·1174·1175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알림 및 반론보도)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알림 및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A대학교 B 교수가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일부 제자에게는 수업 조교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단 복귀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B 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B 교수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교원징계의결요구서에는 성추행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단에 복귀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성추행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언급한 바 없음에도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했으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인건비 유용과 관련한 신청인의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관계로 추후보도는 현 시점에서 어려워 보이고, 제자들과의 통화 내용은 직접적 진술이 아닌 전언을 옮긴 것이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인은 그간의 수사 내용을 알림보도를 통해 게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무혐의가 확정되면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재차 하겠다고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알림보도는 수용 가능하나 반론보도 게재 여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 알림 및 반론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이후 신청인은 성추행 및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 피신청인 언론사를 상대로 다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추후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A대 B 교수가 돌연 강단에 ‘셀프 복귀’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 A대 대학원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B 교수는 최근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해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일부에게는 수업 조교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강단 복귀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략]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학내 조사를 담당했던 A대 인권센터가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B 교수는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알림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림 및 반론보도] ‘제자 성추행’ 의혹 A대 교수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대 B 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후 최근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해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강단 복귀를 예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OO경찰서 수사 결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관하여 20XX년 △월 △일자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20XX년 ▲월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B 교수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제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강단 복귀를 언급하거나 일부 제자에게 수업 조교(TA)를 맡아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알림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 본문 하단에 알림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단,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들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는 제외)을 묻지 아니한다.



## 사례 24 2021서울조정1226·1227·1228 정정·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기초광역단체 의원)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후속보도)

구의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 후속보도에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추후보도 내용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구의회 의원 A 씨가 농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 혐의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 B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했다는 것과 3기 신도시 지정 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사들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은 B지구 일대 농지와 관련해 어떠한 혐의로도 입건된 적이 없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토지는 ○○구 △△동 토지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 B지구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온 것임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도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추후보도와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중재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 B지구 인근 토지 관련 혐의에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송치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중재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정 및 추후보도 내용을 후속보도 형식으로 게재하겠다고 하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경찰은 ◇◇ ○○신도시와 □□ B신도시 주변에 30억 원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의회의원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20XX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 B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후속보도문

**보도제목:**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 구의원 투기 혐의 벗어

**본문내용:** ◇◇ ○○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구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은 ◇◇ ○○구 A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 ○○테크노밸리 예정지 등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도시 지정 전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니다.

A 의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 B지구 인근 부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의원을 지난 3월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의원은 "고교 졸업 이후 약 40년간 토마토, 쌈, 채소 등을 경작했으며, □□ B지구 토지는 20XX년 매입해 혐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후속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 2021서울조정2931 추후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북무지도관이 사회복지무원을 성추행하였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병무청 소속 북무지도관이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무원의 무릎을 1분간 만지면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회복지무원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아픈 부위를 본인이 직접 확인시켜주어 지압을 해준 것뿐인데, 희망하던 북무기관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사회복지무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투서를 했고, 이를 토대로 언론사가 신청인에게는 사전 확인도 하지 않은 편향된 보도를 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있었으므로 추후보도를 권유했고, 피신청인 언론사 역시 추후보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일부 수정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경기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방병무청 소속 북무지도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북무지도관 A 씨는 20XX년 △월 △일 ○○지역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무원 B 씨의 무릎을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 씨가 무릎에 비골신경증을 호소하자 A 씨가 바지를 걷어 올리라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약 1분 정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담아 고소장을 지난 17일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추후보도] 사회복지무요원 추행 혐의 병무청 지도관, 무혐의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보는 20XX년 △월 △일 조정대상보도에서 ○○남부경찰서가 □□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남부경찰서 수사 결과, □□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 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XX년 ▲월 ▲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섹션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경기>섹션 기사목록 3번째 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